

국교위가 ‘폐지론’을 피하는 방법

태평로

김승범

주말뉴스부장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했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들어 부쩍 사람들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자임의사를 밝히고 특검이 이 위원장 사퇴와 국교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 말고 국교위라는 기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교위는 출범 3년 된 조직이다.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다만 내부 갈등이 자주 보도됐다. 게다가 국교위는 2022년 9월 출범 후 30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된 국가 교육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그나마 현재 개편 휴업 상태다. 이 위원장 말고도 위원 6명이 지난 4일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출범 전부터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돼 ‘정쟁(政爭)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컸다. 교육 정책은 이해관

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념적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 영역이다. 정치색을 띤 인사들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결과는 예측대로였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충돌했고 양측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를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하 전문위원회는 내용 끝에 지난해 11월 해체됐다가 올해 1월 다시 구성됐다.

국교위 1기는 사실상 빈손으로 이달 막을 내린다. 대학 입시와 교육 과정 등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교육

1기 국교위, 별다른 성과 없이 300억원 쓰고 빈손으로 종료 새 위원장 정치 성향 논란 다른 위원들 전문가로 채워야

발전 계획’을 작년 9월 내놓겠다고 했지만 몇 차례 미뤘다. 지금으로서는 발표 시점조차 불투명하다. 성과를 내기는 커녕 ‘수능 이원화’나 ‘내신 절대평가’ 같은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이 외부로 흘러나와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곤 했다.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다. 2021년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발 속에 국교위 설치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정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교육계에서는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에 알맞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국교

위 위원 21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추천 9명 중 3명이 여당 몫이다. 여기에 교육부 차관 등을 합치면 과반을 친정부인사로 채울 수 있다. 처음 법안에는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라는 조항이 있어 문 정부 임기 말 국교위 출범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입법 날치기’라는 비난과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의식해 출범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제 2기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소수 여당 체제이던 1기 국교위와 달리 거대 여당이 뒤를 받치고 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차정언 전 부산대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총장 경력 외에 교육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만한 이력을 찾기 어렵다. 정파색이 짙다는 평가도 많다. 과거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두고 “학생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국교위 수장으로서 책임자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교위가 ‘정권 초월적 교육정책’을 마련하려면 나머지 위원은 정치색 없는 교육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편파성을 걷어내고 합리적 논의 기구로 거듭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교위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면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에 직면할 것이다.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 몰랭루주에서, 1882~5년, 캔버스에 유채, 123x141cm,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소장.

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상류 사회에서 낙마하듯 떨어져 버린 그는 술과 매춘 부에게 몸을 맡긴 채 유흥가의 초라한 밑바닥을 그린다 1901년 9월 9일 짧은 생을 마감했다. 잘라내야 할 만큼 기괴했던 메이 밀턴의 얼굴에서 화장을 지우고 조명을 내린 뒤의 진짜 모습을 로트레크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포스트엑 교수·서양미술사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8]

‘몰랭루주’ 댄서의 진짜 얼굴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Henri de Toulouse-Lautrec·1864~1901)의 ‘몰랭루주에서’를 들여다보면 그림 오른 쪽, 여자 얼굴을 그린 부분을 도려내려 캔버스를 세로로 잘랐다 다시 이어 붙인 자국이 선명하다. 화상(畫傷)이 이 얼굴 때문에 그림이 안 팔린다고 생각하고 잘라냈던 것 같다. 얼굴 주인은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나가던 나이트클럽 ‘몰랭루주’의 댄서이자 가수 메이 밀턴이다. 때마침 두꺼운 무대 화장을 하고 조명 아래를 지나가는 바람에 기묘하게 시퍼런 얼굴이 돼 버렸다.

밀턴 뒤, 뒤돌아 앉은 오렌지색 머리카락은 강강 댄스로 무대를 사로잡던 잔 아브릴, 서서 머리를 매만지는

여성은 전설적 댄서 ‘라 굴뤼’다. 인기 스타들 사이 신사들은 몰랭루주의 단골들, 속된 말로 ‘죽돌이’다. 그러나 몰랭루주 최고 ‘죽돌이’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로트레크였다. 화면 뒤쪽, 구부정하게 선 남자 옆의 유난히 키가 작은 이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로트레크는 왜소증을 앓은 데다, 어릴 때 낙마 사고를 당한 탓에 작은 키에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 그의 부친은 막대한 재산과 고귀한 혈통을 가졌으나 말과 독수리, 연날리기에 열광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기행을 일삼았다. 관습을 저버리고 파격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화가가 아버지를 닮았음이 틀림없으나, 아버지는 말을 타지 못하는 아들

社 說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1년 유예를 두고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대법원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

이 법안이 논의된 과정을 봐도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비판이 커지자 이 법안들은 철회했지만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사법부 등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증원 규모를 4명 줄여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상

고 사건은 증가하는데 대법관 숫자는 1987년 이후 변동이 없으니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3000건을 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사실상 대법원 체제를 바꾸는 일이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 사안이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대법원 정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들을 보조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하는데 일선 법원에서 재판관을 해야 할 이들이 대법원으로 가면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1·2심 재판은 더 늘어질 수 있다.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대법관 수를 늘리면 하급심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일수록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왜 26명으로 늘려야 하는지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 개정이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만 했다. 국민에게 설명 없이 밀실에서 논의하다 보도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선다는 것은 앞으로도 밀실에서 자신들끼리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 같은 중요한 문제는 정략적 계산 없이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마땅하다.

한국이 신생 독립국 된 듯한 민주당 정부 개편 독주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마구 뒤집고 새로 만드는 게 마치 정부 창설 시기를 반복케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하위 법률에 의해 개편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이라고 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선거에서 이긴 뒤 ‘정부 혁신’이란 명분으로 부처를 쪼개거나 합치고 새로 만드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근간을 흔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편은 드물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논의 한 번 없었다. 한 정당이 선거 한번 이겼다고 이렇게 해도 되나.

검찰청을 없애고 그 주요 기능을 경찰이 하게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의 기존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범죄 수사가 상당 부분 경찰에 넘어가 있는데, 그 뒤 수사 무마·지연, 사법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더 심각해져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방법은 검찰청을 먼저 폐지해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은 상공부에서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왔는데, 이번에는 환경부에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 수립은 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 전략에 맞는 것이 정상이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부서에 맡기는 것 자체가 주객전도다. AI 시대 대응이 되겠나. 국민은 전기 요금 인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정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나뉘면서 금융권에 한숨이 나오고 있다. 행정부 아닌 사법부도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신기술의 등장과 국제 안보·경제 질서 변화 등으로 인해 정부 조직도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부처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예산을 절약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은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말 잘 듣는 정부’ ‘한풀이 개편’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안이 만들어졌을 때 시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

4억 재산 의원의 10억 주식 거래, 이 사람뿐일까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최소 3년간 10억원 넘는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 의원이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재산의 배가 넘는 돈을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거래 창을 돌려가며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지난 대선 때 후보 비서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했다. 대선 후에 중책인 국회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인공지능(AI) 정책 담당 부과장도 맡았다. 이런 사람의 역대 차명 주식 거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의원은 주식 투자 자금의 출처에 대해선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 자금”이라고 해명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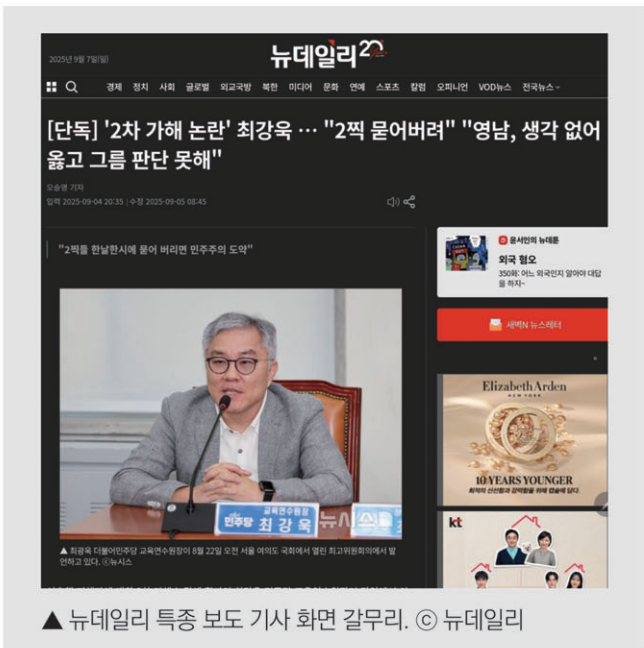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공직자 재산 공개의 허점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주식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외비성 정책 보고도 받고, 법안 발의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주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방법이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한 뒤에 더 이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하고, 특검이 이번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무시했다. 자정 대책도 없다. 신고 재산의 몇 배를 주식 투자하는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공직자는 결코 이 의원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최악 극좌 전체주의자 최강욱의 발상법

스탈린·모택동·폴 포트·김일성 3대 수준 ... "2찍들 한날한시 물어 버리면..."

영남 비하 “생각 없어 옳고 그름 판단 못해” 국민 절반 이상 학살하라고 선동하는 격 모 전복 인사도 “보수반동 10만 명만 죽이면~” 국힘, 왜 내란선동죄로 고발 안 하는가?



뉴데일리의 특종 보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최강욱(57)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그는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소한 문제. 그게 죽고 살 일이나”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 후속 보도에선 더욱 섬뜩한 망언까지 쏟아냈다.

뉴데일리 특종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은 8월 30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자신의 책 토크쇼에서 우파 지지 국민들을 겨냥, “2찍들을 한날한시에 물어 버리면, 민주주의가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은 생각이 없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극언도 곁들였다.

《2찍》은 기호 2번을 쓰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 대통령 이재명은 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유세에서 《2찍》이라 했다가 사과했다.

민변 출신 586 좌익 정치인의 민낯

최강욱은 1968년 전라북도 남원 출생. 전라 고교-서울대 법대 졸업, 민변 출신 586 좌익 정치인. 좌익정권-정당에 반대하고 비(非)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한날한시에 물어버리면~”이라는 극언은 좌익이라는 말로는 부족

하다. 스탈린, 모택동, 폴 포트, 김일성 일가 수준, 극좌 중에도 최악의 극좌 전체주의자 수준이다.

최강욱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공직직강비서관을 지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냈다.

그러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사건으로 2023년 9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른바 《잘잘이》 운운하는 낯 뜨거운 발언의 당사자이다.

이런 자가 1백만 당원 교육한다니

최강욱은 이재명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뒤 불과 일주일 뒤인 8월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됐다. 교육연수원은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던 2023년 1월 이른바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었다. 연수원장은 10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 교육을 총괄한다. 이재명은 “당직 중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같은 자가 수장인 교육연수원이 당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태연히 "피바다" 선동하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뉴데일리 특종 보도로 처음 밝혀진 최강욱의 역대급 망언과 관련, 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을 학살하라고 선동하는데 국힘은 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지 않는가?”라고 미온적 대처를 질타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서울법대를 졸업한 자유우파 성향 김향훈 변호사는 SNS에 최강욱 기사를 링크하며 “2008년쯤엔가, 전북의 내 친한 고등 친구 하나가 나에게 《보수반동 10만 명만 죽이면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하게 민주화 될텐데~》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최강욱과 같은 섬뜩한 극좌적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9월 7일 게재 되었습니다.

